

서해 교전 이후의 한반도

이원섭 /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한반도의 이중 상황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올라가고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차관급회담이 열리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한때 벌어졌다. 한반도의 이중적 상황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뒤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의 말 실수'를 빌미삼아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건이 터져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고, 이산 가족 문제를 협의키로 한 차관급회담이 지지부진 걸돌며 실망을 안겨준 것은 서해 교전의 후유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 사안별로 따로 진행되는 남북 관계의 복잡한 구조에 혼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위기설'을 몰고 왔던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가 끝나 이 시설이 핵과는 관련이 없는 커다란 지하 터널임이 판명되고, 한때 대북 강경책을 펼 것으로 알려졌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았으며,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비료 지원을 하고 남북당국이 베이징에서 차관급회담을 갖기로 하

는 등 한반도 정세가 모처럼 해빙 쪽으로 가는 듯 하던 시점에 서해 무력 충돌 사건이 벌어져 혼란감은 더욱 크다. 한편, 대화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졌으며, 이에 기대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냉전 틀이 조금씩 갈라지려는 즈음에 터진 파열음이기엔 그 소리는 더욱 크고 파장은 넓고 깊다.

서해 사건의 충격과

서해 사건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외화벌이로 제법 큰 몫을 하는 제철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위해 월선했다는 것이 초기의 분석이었다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미국에 일깨움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담판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분석, 평소 불만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이 지역을 분쟁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 등 다양하다. 북방한계선 자체가 유엔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었기에 북한은 그동안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왔었다. 처음에는 일정한

정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수준이었는데, 남쪽에서 보수 여론에 몰려 의외로 강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이 확대되며,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해 교전 사태로까지 치닫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처음 발단이나 북한의 내밀한 속셈이 무엇이었든, 서해 교전의 결과는 북한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해 교전은 1953년 휴전 이후 사실상 남북 정규군 사이의 첫 대규모 전투였다. 과거 남북 사이에는 이번보다 훨씬 심각했던 일촉즉발의 순간도 많았고 이런 저런 형태의 무력 충돌도 있었으나 정규군간의 직접 전투는 아니었다.

서해 교전에서 드러난 엄청난 전투력 차이에 북한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4분간 교전에서 우리는 경미한 부상 및 경비정 파손에 그친 반면,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여러 척이 대파됐다고 한다. 북한군의 인명 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막상 교전을 치른 우리 해군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전투력 차이가 컸다고 한다. 컴퓨터로 자동 입력돼 순식간에 발포하는 함포의 위력과 수동으로 조준하는 북한군의 포격은 화력과 속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해공군 가운데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막상 붙어보니 상대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라크전이나 유고전에서

보듯 현대전은 첨단 무기 경쟁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투력은 결코 향상될 수 없다. 낮은 함정에 기관포 수준으로는 아무리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서해 교전이 남북 군사력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북한에는 이번에 교전한 배들보다 크고 중무장한 전투함들이 많다. 1998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쪽의 선박이 200여 척임에 비해 북쪽은 990여 척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북쪽은 소형선 중심이라 총톤 수에서는 오히려 남쪽이 앞선다고 한다. 공군과 육군의 경우도 병력에서는 북쪽에 비해 열세지만, 무기의 성능은 남쪽이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준을 들어 북한의 군사력을 부풀려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이는 특정한 두 분야에 과도한 투자비를 쏟아붓는 사회주의권 특유의 불균형 발전' 정책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서는 최첨단, 여타 다른 분야에서는 낙후를 면하지 못하는 심한 이중 구조를 보이는 것이 북한 사회다.

군사력이 열세라는 국방부의 공식 주장과는 달리 우리쪽이 이미 훨씬 앞서 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여기에 주한 미군의 존재까지 감안한다면 남북간 군사력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의 막강한 화력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꼽힌다. 최악의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며 공멸하는 마지막 수단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다.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나 경제력의 우위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한반도 상황은 가장 잘 보여준다.

현격히 드러난 군사력 차이

북한은 최근 들어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된 것을 매우 두려워해왔다. 지난해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부쩍 높였고, 얼마전 미국과 신가이드라인법을 체결했다. 북한은 유고 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비난하면서, 유고 다음 미국의 공격 목표는 자신들이라고 경계해왔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더욱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된 5027-98 작전 계획을 놓고 북한은 한미 양국의 북침 전략이라고 주장해왔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인 미국이나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현 상황의 안정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세력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상황 전개를 좌시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상투적 트집이나 체제 단속용 엄포로 비치는 북한의 주장이 그들 처지에서는 절박할 수도 있다. 실제 북한은 얼

마 전까지 실시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동안 으레히 準전시 태세로 들어가 평상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진지로 올라가 방어 태세에 돌입하는 과잉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서해 교전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북한 경비정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으며, 굴욕을 감수하는 것도 일이 커져 혹시 한미 연합군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서해 교전으로 인한 북한 지도부의 충격은 매우 커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군사 강국' 강성 대국'을 외치며 내부적으로 군사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현대화된 무기에 당해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차이가 너무도 현격했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몰린 북한은 그동안 그들 처지로서는 과도한 비용을 군사비로 쏟아부었지만, 절대 금액으로 본다면 남쪽에 비할 바가 못됐다. 북한으로서는 인정하기 괴로운 일이겠지만, 이제 재래식 무기로 남쪽을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기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몰아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지켜 볼 일이다.

관광객 억류로 햇볕 정책 곤경에

서해 교전으로 남북 관계는 당분간 부정

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서해에서 당한 패배의 양값음을 하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쪽에서 비록 실수일지라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를 빌미삼아 가혹한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한 금강산 관광객의 말 실수를 트집잡아 귀순 공작’이라고 뒤집어씌워 6 일간이나 억류하며 남쪽 정부의 애를 먹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금강산 관광 행태를 볼 때, 평소 같으면 벌금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일을 크게 벌인 것만 봐도 구겨진 자존심과 뒤뜰린 심사를 푼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상불란하게 기획되거나 치밀하게 조율돼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트집거리가 생긴 이상 최대한 애를 먹이면서 실리적으로도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감정적 처사에 남쪽 여론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게 만들었다. 신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녘 땅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서해 교전 직후 떠난 금강산행 관광선에 마치 아무일이 없었다는듯이 예약자의 97%에 달하는 500명 승객이 탑승해 의연하게 금강산을 다녀온 것도 신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설사 작은 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범한 주부를 귀순 공작 요원’으로 몰아간 것은 남쪽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으며, 불안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

이 일로 정부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어갔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뒤바꿔 놓으려는 보수층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서해 사태 초반에 나온 햇볕 정책 비판에는 정부로서 충분히 대응할 논리가 준비돼 있었다. 비록 서해 상에서 교전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북의 도발이 햇볕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비판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설득력이 떨어졌다. 서해 교전 뒤 일체의 대북 경협이나 비료 지원은 물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황을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다. 과거 김영삼 정권에서 남북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일체의 대화를 중단하는 등 과잉 대응을 일삼아 일관성을 잃고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 비판을 들었던 터였다. 보수 세력들의 주장대로 서해 교전을 빌미 삼아 약속했던 대북 비료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베이징 차관급회담에 연계시킬 것이고, 이는 모처럼 성사된 당국자회담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임이 너무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서해 교전 직후 금강산 관광을 예약했던 관광객들이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관광길에 오른 것도 보수파들 주장의 근거를 실증

적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로서는 강경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객의 신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정경 분리 정책의 성공물인 금강산 관광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남쪽 정부의 햇볕 정책을 시험대에 올렸을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주는 것이었다.

난항 겪는 남북차관급회담

이런 와중에서 열린 베이징 차관급회담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남북차관급회담은 비공식 접촉 결과 이산 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합의가 돼 있었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0만 톤의 비료 가운데 10만 톤을 회담 전에 먼저 보내고, 회담에서는 이산 가족 문제에 전향적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하는 등 여러 겹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남쪽에서는 차관급회담이 잘되면 장관급·총리급으로 격을 높여간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이산 가족 문제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문제다. 서로 소식을 알고 오가다 보면 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북한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때문에 가족이 수십 년간 생사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

도 가장 큰 비극이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민족의 부끄러움이다. 이에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고, 막후 협상을 거쳐 차관급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산 가족 문제의 해결은 생사 확인·서신 교환·상봉·고향 방문·재결합 등의 여러 단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봉까지만 가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상당수 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진다면 실향민들로서는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해 사건으로 차관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가 하면 장소 문제를 트집잡는 무례를 범한 것은 남북회담에서 으레 있었던 '살바 싸움'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첫날 기조 발언에서 서해 사건을 남쪽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한다. 2차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회담이 끊기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판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

예기치 않았던 서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남북이 해빙 쪽으로 가던 지금까지의 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분간 충격을 추스르고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사건 직후 북한이 무력 대응을 자제하고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분간 남쪽 인원들의 평양 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단한다”고 반응한 것이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억류했던 금강산 관광객을 예상보다 빨리 돌려보낸 것이나, 지지부진 하지만 북측이 차관급 회담을 7월 1일로 제의하여 연결의 끈을 유지하고 있는 점들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서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대 남너 농구단이 평양에서 경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남북한노동자축구대회도 8월에 평양에서 열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평탄하게 가리라고 낙관하기도 어렵다. 한반도의 전체 구조가 그리 돼 있지 않다. 지난번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 지원을 할테니 미사일 개발과 생산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금창리 지하 시설 조사로 핵의혹이 해소된 마당에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압력은 북한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보장이거나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없이 무장 해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주권 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남한 강경파들의 행태를 보면 한·미·일 정부의 약속을 순순히 믿기 어려운 것도 북한으로서는 딜레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평통은 “현 정세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하는 최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북미간에 직접적인 평화체제 협상을 주장하고 나왔다. 평화협정은 남북 사이에 맺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여하튼 서해 사태 뒤 평화체제 구축 쪽으로 논의의 핵심이 옮겨지는 듯한 모습은 일단 무력 충돌 재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긴장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해 사건이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차관급 회담 파행 등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가 국내 강경 여론을 부추기고 있으나, 긴 안목에서 소화해야 하며 포용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페리보고서로 집약되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 수립에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켜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포괄적 접근 방안이 좌절된다면 남는 것은 대결과 반목과 군사적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